

# 한국 언론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담론:

「동아일보」의 보도 기사와 사설을 중심으로

허윤철\* · 강승화\*\* · 박효주\*\*\* · 채 백\*\*\*\*

지난 30년간 한국의 정치 변동 과정에서 5.18 담론은 가장 논쟁적인 이슈 중 하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대표적 신문 중의 하나인 「동아일보」를 대상으로 그 지면에 나타난 5.18 담론의 주요 특징과 변화 양상을 살피고, 한국의 정치·사회적 맥락과는 어떠한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동아일보」 지면에 나타난 5.18 관련 용어에 대한 분석과 사설 보도에 대한 질적 담론 분석을 통해서 1980년부터 2008년까지 「동아일보」가 구성하고 있는 5.18 담론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동아일보」에서 5.18을 지칭하는 용어는 초기 지배적 용어로 광주사태가 사용되다가 1983년 유화국면 이후 광주민중항쟁, 광주학살, 광주항쟁, 광주의거와 같은 대항담론의 용어들이 차례로 등장하고, 1989년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이 지배적 용어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아일보」 사설의 5.18 담론은 비극적 사태 담론, 진상규명 담론, 명예 회복 담론, 역사 심판 담론, 적극적 처벌 담론, 정치담론화의 순으로 전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동아일보」의 5.18 담론 변화는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동아일보」 스스로 5.18 담론의 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지배담론의 변화가 발생한 후 이를 반영하며 새로운 지배담론을 공식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담론분석, 언론사, 동아일보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이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 주류 언론이 지난 30년간 5.18 담론을 어떻게 현실 구성해 왔으며, 한국의 정치변동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여 왔는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1980년 5월 18일 발생한 5.18은 열흘간 311명의 희생자와 3,046명의 부상자, 439명의 구속자를 낸 역사적 사건이지만(김영택, 2007, 121쪽), 한편으로는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정치변동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주도적 의미를 두고 경합해 온 하나의 담론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광주사태로 시작하여 광주민중항쟁, 광주학살, 광주항쟁, 광주의거, 광주민주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등으로 이어져온 용어의 변화에서도 드러난다. 즉 한국 사회에서 5.18의 의미는 단일하고 고정된 것으로 존재해 온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세력들 간의 갈등과 투쟁 속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변형되고, 재구성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동안 5.18 담론은 정부를 비롯하여 학계, 시민 단체, 운동권 등 다양한 담론주체들에 의해 생산되어 왔으며, 이들이 생산하고 유포하는 발표문과 성명서, 유인물에 대한 담론 분석은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예를 들어, 이용기, 1999; 임철성·노시훈, 2004; 전재호, 1999; 정일준, 2004; 최정운, 2007;

\*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수료(dada321@pusan.ac.kr)

\*\*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ksh80@pusan.ac.kr)

\*\*\*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수료(hyojupark@pusan.ac.kr)

\*\*\*\*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bchae@pusan.ac.kr, 교신저자)

허만호·김진향, 2007). 그러나 정치학, 사회학, 역사학 등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해 언론학에서 5.18 담론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자하는 시도는 대체로 인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강철수·윤석년, 2010; 윤영태, 2009).

주지하다시피 언론은 하나의 사회적 사건이 특정한 ‘의미’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구이다. 또한 언론은 사건에 일정한 서사(narratives)를 부여하고, 이를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언론이 중요한 사회적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이유로 진술의 체계가 일대 변화를 겪게 되느냐를 밝혀내는 것”(Foucault, 1980/1991, 145쪽)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표적 주류 언론인 『동아일보』의 지면에 나타난 5.18 담론의 특성과 변화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일보』의 지면에 나타난 5.18 관련 용어에 대한 분석과 사실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지난 30년간 한국의 주류 미디어가 5.18문제를 어떻게 현실 구성해왔으며, 정치·사회적 맥락과는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선행 연구의 검토

이 연구는 하나의 사회적 실체로서의 5.18이 아닌 의미로서의 5.18, 즉 5.18 담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해 의미의 문제, 담론적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필연적으로 과거 ‘그 자체’로 우리에게 재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의 사건이 특정한 ‘의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석의 과정이 필요하며, 언론은 사건의 요소들을 연결하고 꿰매어 ‘뜻이 통하는’ 서사 혹은 진술 체계로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Hall, 1982/1996, 265쪽). 많은 연구자들은 사건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한 서사와 사건의 의미를 구축하고 있는 프레임이 특정한 현실인식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Gamson et al, 1992; van Dijk, 1988),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적 상황과 역사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담론의 변화에 주목해 왔다.

일반적으로 담론에 대한 분석은 전통적인 이데올로기 분석 보다 풍부한 정치·문화적 함의를 지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Macdonnel, 1986/1992; Mills, 1997/2001). 이는 특정한 역사적 시점에 구축된 의미구조가 고정된 이데올로기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들과의 접합(articulation)을 통해 의미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느슨한 구조를 지닌다고 보기 때문이며, 언제나 상태가 아닌 과정으로서만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Hall, 1980). 그러나 기틀린(Gitlin, 1980)이 지적하였듯 언론이 생산하고 유포하는 담론은 대체로 정치-경제적인 지배구조와 지배 이데올로기의 경계선 안에 머문다는 점 역시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언론은 다양한 의미주체를 사이의 갈등과 담론 투쟁이 일어나는 공간이지만 그러한 자율성은 지배체계 안에서 용인되는 외적 한계를 지닌다는 뜻이다. 할린(Hallin, 1986) 역시 기틀린과 비슷한 주장을 하였는데, 언론이 다룰 수 있는 문제 영역을 ‘동의의 영역’(sphere of consensus), ‘합법적 논란의 영역’(sphere of legitimate controversy), ‘일탈의 영역’(sphere of deviance)으로 구분하여 언론 보도에서 어떤 주제가 기사화되고 어떤 주제가 무시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주류 언론의 자율성이란 대체로 정치-경제적 체계를 존중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며 결국 현상태를 유지하는 메커니즘(boundary-maintaining mechanism)에 가깝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담론을 분석함에 있어서 의미 생산자 내부에서 발생하는 의미 체계의 변화와 외부적 조건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sup>1)</sup>. 하지만 지금까지 5.18 담론과 관련한 연구들은 이 둘을 통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시도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거시적 차원에서 5.18 담론 변화를 분석한 연구들의 경우 담론의 생산 주체에 대한 분석을 간과한 채 정치·사회적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였고, 담론 생산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언론의 5.18 담론을 분석한 연구들은 역사적·사회적 조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통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도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전자의 예로 전재호(1999)의 연구를 들 수가 있다. 전재호(1999)는 5.18담론의 변화와 한국사회의 정치 변동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리하면서 5.18담론을 ‘국가가 5.18담론을 독점하던 시기’(1980년~1983년), ‘국가와 민주화운동권의 담론투쟁이 전개되던 시기’(1984년~ 1987년), ‘정치권 주도의 5.18담론이 실천되던 시기’(1987년~1992년), ‘국가주도의 담론 실천이 있었던 시기’(1993년~1997년)로 구분하였는데, 이 연구는 주로 정치적 변동의 관점에서 시기를 구분 하였다. 그리고 이용기(1999)의 연구에서는 5.18에 대한 역사 서술의 변화양상을 ‘은폐와 은밀한 되새김의 시기’(1980년~1986년), ‘진실 공방과 변혁론적 자리잡기의 시기’(1987년부터 1992년), ‘역사 바로 세우기와 역사화의 시기’(1993년 이후)로 구분하였는데, 이 연구는 역사 교과서 등 역사적 문헌에 기초한 분석을 시도 하였다. 또한 5.18 담론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니지만 김재균(2010)의 연구에서는 5.18관련 담론의 변화를 ‘5.18희생자 추모와 진실 알리기의 시기’(1980년~1983년), ‘5.18진상규명의 인식전환의 시기’(1984년~1987년), ‘5.18정당성 확보의 시기’(1988년~1990년), ‘5.18의 제도적 정당성 확보의 시기’(1990년~1995년)로 정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별도의 정당화 없이 시기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표 1>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5.18담론의 변화를 분석한 주요 연구들의 시기 구분을 정리하였다.

<표 1> 거시적 차원에서 5.18담론의 변화를 다룬 주요 연구들의 시기 구분

	1980~1983	1984~1987	1987~1992	1993~1997
전재호 (1999)	5.18담론 국가 독점	국가와 민주화운동권의 담론투쟁	정치권 주도의 5.18담론 실천	국가주도의 담론 실천
이용기 (1999)	은폐와 은밀한 되새김		진실 공방과 변혁론적 자리잡기	역사 바로 세우기와 역사화
김재균 (2005)	5.18희생자 추모와 진실 알리기	5.18진상 규명의 인식전환	5.18정당성 확보 (1988~1990)	5.18의 제도적 정당성 확보 (1990~1995)

한편 후자의 예에 해당하는 연구들은 언론을 담론이 구축되는 대표적인 장소로 보고 언론이 구성하고 있는 5.18 담론에 대한 분석에 치중하였는데, 주로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담론 변화를 추적하고 있다. 예컨대 윤영태(2009)는 2000년대 이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광주일보」, 「부산일보」의 5.18 관련 기사들을 분석하여 신문들이 공통적으로 5.18을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민주항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각 신문들이 기반한 지리적, 정치적 위치에 따라 구축하고 있는 5.18의 이미지가

1) 언론은 담론이 직접적으로 구축되는 장소이면서 의미를 둘러싼 투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다 (Hall, 1982/1996).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강철수와 윤석년(2010)은 주요 일간지를 대상으로 5.18 관련 기사의 유형과 프레임 특성 등을 분석하여 중앙 일간지와 광주 지역 신문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 송정민과 한선(2005)은 「광주일보」와 「조선일보」의 5.18 관련 보도사진을 비교하여 두 신문 모두 5.18을 단순한 지역적 사건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특정한 시기의 담론을 분석한 것이어서 담론의 장기적인 변화 추이는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한편 송정민(1999)은 1980년에서 1997년까지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5.18관련 보도 행태를 정권별로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 역시 양적 내용분석에 치중함으로써 언론의 외적 환경과 한국사회의 정치·사회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박선희(2002)의 연구는 5.18특별법 제정 과정과 관련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사설을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 역시 장기적인 담론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연구는 아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언론학 분야에서 축적되어 온 5.18 담론 관련 연구들은 정치·사회적 조건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거나, 담론의 장기적 변화 양상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의 설정

지금까지 5.18 담론에 관한 주요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장기간에 걸친 5.18 담론의 변화를 살핀 연구들이 담론 생산 주체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간과한 채 정치·사회적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음을 밝혔으며, 반대로 담론의 생산 주체인 언론의 5.18 담론을 분석한 연구들은 통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도가 부족했다는 점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적 변화 과정에서 대표적 주류 언론인 「동아일보」가 구성하고 있는 5.18 담론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통시적 관점에서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분석 방법을 채택할 것이다. 먼저 「동아일보」의 5.18 관련 전체 기사에서 5.18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어느 시기에 어떠한 맥락으로 등장하여 어떠한 변화를 겪는지를 살필 것이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어떠한 용어로 명명<sup>2)</sup>하는가는 사건에 대한 사회적 해석이나 집합적 기억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문제이다. 또한 용어 자체가 일정한 해석의 틀을 형성하고 특정한 현실인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동안 5.18을 지칭하는 용어는 광주사태에서 광주민주화운동까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이는 한국사회의 정치·사회적 변동 과정에서 5.18이 중요한 의미 투쟁의 대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용어의 변화를 살피는 것은 5.18 담론의 전반적인 변화 과정을 살피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영어에서 ‘명명하기’에 해당하는 용어로는 이름붙이기(naming)와 이름짓기(labeling) 등을 들 수 있다. 이 두 용어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그 차별성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명명하기’는 이름붙이기(naming), 이름짓기(labeling) 등의 개념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연구문제 1: 『동아일보』의 5.18 보도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은 무엇이며, 한국의 정치변동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여 왔는가?

그러나 용어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동아일보』가 구성한 5.18 담론의 실제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으며, 『동아일보』의 구체적인 입장과 편향 역시 드러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사실에 대한 별도의 질적 분석을 병행하여 분석을 보완하고자 한다. 기틀린(Gitlin, 1980)은 미국의 신문들이 객관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스스로의 주장을 담기 위해 사실을 활용한다고 설명하였는데, 외형적으로 객관주의 저널리즘을 표방하며 사실과 가치의 분리를 추구해 온 한국의 주류 신문 역시 사실에서 만큼은 직접적인 입장과 편향을 드러내왔다. 따라서 우리는 『동아일보』 사실에 나타난 5.18 담론 분석을 통해 『동아일보』가 5.18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 왔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설정된 두 번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2: 『동아일보』의 사실에 나타난 5.18 담론의 주요 특징은 무엇이며, 한국의 정치변동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여 왔는가?

## 2) 분석대상과 데이터 수집 방법

분석대상 신문으로는 『동아일보』를 선정하였다. 『동아일보』는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함께 한국의 대표적 시장 지배 신문으로서 역사와 영향력, 도달범위 등에 있어서 주류 신문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동아일보』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들 대표적 시장 지배 신문들이 이데올로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이원섭, 2007), 세 신문을 함께 분석한 실증적 연구에서 취재원의 성격이나 대북문제에 대한 태도 등에 있어서 『동아일보』가 세 신문 중 가운데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이원섭, 2007; 이재경·김진미, 200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동아일보』를 한국의 주류 지배 언론으로서의 대표성을 지닌다고 보고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기간은 5.18이 발발한 1980년 5월 18일부터 노무현 정부의 임기가 끝난 2008년 2월 24일까지로 하였다. 분석기간을 노무현 정부까지로 한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재의 정권을 연구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언론사(史) 연구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네이버의 뉴스검색 서비스 뉴스라이브러리(<http://newslibrary.naver.com/>)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데이터베이스인 KINDS(<http://www.kinds.or.kr/>)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이유는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가 1920년부터 1999년까지, KINDS가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기사 검색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부터 1999년도까지의 데이터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수집하였고, 이 후의 데이터는 KINDS를 이용해 수집하였다.

데이터 수집을 위한 검색어는 총 7개(광주사태, 광주민중항쟁, 광주학살, 광주항쟁, 광주의거, 광주민주항쟁, 광주민주화운동)가 사용되었다. 검색어는 5.18관련 국내 문헌들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과 각 주기별 동아일보의 사실에 등장하는 용어를 조사하여 ‘광주사태’, ‘광주항쟁’, ‘광주학살’, ‘광주의거’, ‘광주민주화운동’을 일차 선정하였고, 파일럿 조사를 통하여 ‘광주항쟁’과 ‘광주민중항쟁’, ‘광주민주항쟁’ 등의 용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세 키워드를 각각 조사하였다. 키워드

검색 방식의 경우 띄어쓰기라든지 불리언 연산자(boolean operator) 입력 방식에 따라 검색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검색을 수행해본 결과 따옴표 속에 키워드를 넣는 방식이 가장 정확한 검색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키워드를 따옴표 처리하여 검색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검출된 기사 중 중복기사와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기사를 제외한 총 5,342건(사실 187건 포함)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 4. 「동아일보」 지면에 나타난 5.18 관련 용어 사용의 변화

##### 1) 5.18 관련 용어의 변화 추이

먼저 「동아일보」의 5.18관련 용어 사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연도별 용어 사용 빈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는데, 「동아일보」에서 5.18을 지칭하는 용어는 ‘광주사태’, ‘광주민중항쟁’, ‘광주학살’, ‘광주항쟁’, ‘광주의거’, ‘광주민주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5.18 발발 당시에 ‘광주데모사태’, ‘광주지역난동’, ‘광주데모’, ‘광주시민데모’, ‘시민소요사태’ 등의 용어도 등장하였지만 이후 일반적으로 사용된 용어들은 아니다.

「동아일보」의 5.18 관련 용어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는 ‘광주사태’로서 2,153회 등장하였고, 다음으로는 ‘광주민주화운동’이 1,247회 등장하였다. 그 다음으로 ‘광주항쟁’(825회), ‘광주학살’(417회), ‘광주민중항쟁’(350회), ‘광주의거’(203회), ‘광주민주항쟁’(147회)의 순이었다. 사실에서의 등장 빈도 역시 ‘광주사태’가 109회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민주화운동’ 36회, ‘광주항쟁’ 24회, ‘광주학살’ 8회, ‘광주민중항쟁’ 5회, ‘광주의거’ 3회, ‘광주민주항쟁’ 2회로 전체 기사에서의 출현 빈도의 순서와 일치하였다.

용어의 등장 빈도의 변화를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광주사태라는 용어는 1980년에 229회(사실 9회) 등장하여 1983년까지 「동아일보」에서 5.18을 지칭하는 거의 유일한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는 5.18 이후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초기에 공고한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하면서 5.18담론을 독점하였던 시대적 상황(전재호, 1999, 243쪽)과 관련이 있는데, 「동아일보」의 5.18 용어 역시 정권이 구축한 지배적 담론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83년 말에 이르면 억압 통치만으로 체제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 전두환 정권이 조금씩 통제를 완화하기 시작하는 이른바 유희국면이 시작되면서 시민사회 내 운동세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5.18 대항담론들도 부상하기 시작하였다(전재호, 1999, 246쪽). 그러나 「동아일보」에서는 1983년에 대항담론의 용어가 등장하지 않았으며, 1984년에도 광주민주항쟁과 광주학살이 각 1회 등장하는데 그쳤다.

<표 2> 연도별 용어 사용 빈도(괄호 안은 사설의 빈도)

		광주 사태	광주 민중 항쟁	광주 학살	광주 항쟁	광주 의거	광주 민주 항쟁	광주 민주화 운동
전두환 정부	1980	229(9)						
	1981	65(3)						
	1982	90(4)						
	1983	38(3)						
	1984	22	1	1				
	1985	380(20)	18	13	11	5		
	1986	60(2)	5	10	9	5		
	1987	286(8)	14	20	15	34(1)	1	
노태우정부	1988	620(30)	57(2)	124	125(6)	92	21(1)	142(5)
	1989	127(18)	60	89	134(3)	15(1)	19	160(6)
	1990	37(2)	46	30	90(2)	28	16	111(3)
	1991	20(3)	23	3	63	5(1)	15	34(1)
	1992	25	12	3	14	1	2	18
김영삼정부	1993	36(1)	18	9	52(1)	5	16	115(3)
	1994	9(1)	15	8	38(2)	1	2	38
	1995	38(2)	30(1)	36(7)	90(6)	3	14(1)	143(8)
	1996	26(2)	9	25	63	1	10	119(3)
	1997	9	9	4(1)	27(1)	1	7	51
김대중정부	1998	3	9	6	24		3	49
	1999	8	5(2)	4	19(2)	1	5	38
	2000	3	6	4	19(1)		4	44(3)
	2001	3	2		7		1	37
	2002	6	2	6	9		3	21(1)
노무현정부	2003	4(1)	3	2	5	1	1	43(1)
	2004	1	6	4	4		4	43
	2005	2		11	2			20(1)
	2006	5		3	1		1	11(1)
	2007	1		2	4		1	10
합계	2153(109)	350(5)	417(8)	825(24)	203(3)	146(2)	1247(36)	

『동아일보』에서 5.18관련 보도의 빈도가 급증하는 시기는 1985년이다. 이는 이 해 5월의 서울 미문화원 점거사건이 5.18 논의의 확산을 불러왔고, 이 사건 이후 5월 30일에 열린 임시 국회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광주사태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5.18 이슈가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전재호, 1999, 248쪽). 『동아일보』에서도 이 시기에 광주항쟁, 광주의거와 같은 대항담론의 용어가 등장하였으며, 대항담론 용어들의 사용빈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광주민중항쟁이 18회, 광주학살이 13회, 광주항쟁이 11회, 광주의거가 5회 등장하는데 그친 반면 광주사태는 380회(사설 20회) 등장하여 지배적인 용어의 사용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988년은 『동아일보』에서 5.18관련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이자 용어 사용에서도 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국가권력과 시민 사회 사이의 관계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고, 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지형도 크게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1988년 노태우 정부 출범 직전 결성된 민주화합추진위원회의 권고로 노태우 정부가 발표한 ‘광주사태 치유방안’에서 5.18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규정함으로써 5.18의 지배 담론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1988년에 정부가 5.18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에서는 광주사태가 620회(사설 30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여전히 지배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는 두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는데 첫째, 정부가 5.18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규정하기는 하였지만 발표에서 명시적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둘째, 『동아일보』가 5.18담론의 변화 과정에서 특별히 주도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1988년은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가 142회(사설 5회) 사용되고, 광주 항쟁이 125회(사설 6회), 광주학살이 124회, 광주의거가 92회, 광주민주항쟁이 57회(사설 2회), 광주민주항쟁이 21회(사설 1회) 사용되는 등 『동아일보』의 5.18 관련 보도에 큰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한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광주학살, 광주항쟁, 광주의거 등의 대항담론 용어들의 사용빈도가 급증하였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1989년에 이르면 처음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의 사용빈도가 160회(사설 6회)로 광주사태의 사용빈도 127회(사설 18회)를 앞지르고 5.18을 지칭하는 지배적인 용어로 자리를 잡게 된다. 1990년 이후 『동아일보』에서 광주사태의 사용빈도는 광주항쟁의 사용빈도 보다 낮아지며 쇠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동아일보』의 5.18관련 용어의 변화를 하나의 문화가 부상하여 헤게모니적 지배 문화를 이루다가 잔여적인 문화로 쇠퇴하는 과정(Williams, 1977/2003)으로 보면 광주사태라는 지배적 담론이 정통성의 위기를 겪으며 후퇴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담론이 새롭게 부상하여 지배적 담론으로 굳어지는 과정을 겪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담론 변화의 과정에는 한국사회의 정치변동이라는 계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언론의 5.18담론의 변화가 사회적인 5.18담론의 변화를 이끌었다기 보다는 사회전반의 5.18담론의 변화가 언론 보도에 반영되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 2) 용어별 현황

다음으로 『동아일보』의 5.18관련 용어들이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맥락으로 등장하였으며,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폈다. 각 용어들의 첫 출현 시기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용어의 첫 출현 기사의 등장 맥락을 설명함에 있어서 단순히 단체나 행사명을 언급하기 위해 용어가 등장한 경우에는 소극적 사용, 『동아일보』가 주체적으로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극적 사용으로 규정하였다.

&lt;표 3&gt; 용어별 첫 출현 시기

	광주 사태	광주 민중 항쟁	광주 학살	광주 항쟁	광주 의거	광주 민주 항쟁	광주 민주화 운동
첫 등장 시기	80.5.22	84.5.19	84.5.30	85.1.15	85.5.18	87.11.10	88.2.13
첫 적극적 사용시기	80.5.22	88.5.2	88.7.2	88.2.24	87.7.4	88.5.2	88.7.2
사설에서의 첫 등장시기	80.5.24	88.9.1	95.11.26	88.8.17	87.7.17	88.11.12	88.7.25

## (1) 광주사태

‘광주사태’는 5.18발발 당시 계엄사령관 이회성이 첫 담화문 발표에서 처음 규정한 용어로서(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1997), 5.18을 자행한 신군부가 구축한 지배 담론의 용어로 볼 수 있다. 『동아일보』는 사건 발생 사흘 후인 1980년 5월 21일 5.18발발을 처음 보도하였는데, 1면 왼쪽 상단에 ‘광주일원 데모사태’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이 기사에서는 광주사태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데모사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광주사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다음 날인 5월 22일이다. 『동아일보』는 5월 22일자 톱기사인 ‘광주데모 사태 닷새째’에서는 광주사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이회성 계엄사령관의 담화문 전문을 게재한 ‘이성회복 질서유지를’이라는 1면 4단 기사의 부제를 ‘이 계엄 사령관 광주사태에 담화’라고 붙임으로서 광주사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담화문 전문이 게재된 이 기사의 본문에는 광주사태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고 있다. 기사 본문에 광주사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이 날 1면에 2단으로 게재된 ‘박총리 급거 광주에’라는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박총훈 국무총리서리는 22일 오전 김종환 내무 유양수 동자 진의종 보수부장관을 대동하고 급거 광주로 내려갔다. 박총리서리는 -(중략)-현지에서 **광주사태**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관으로부터 사태의 경위와 상황 보고를 들은 다음 사태수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최대통령은 21일 오후 **광주사태** 수습책과 관련, 박총리서리에게 22일 현지에 급히 내려가 필요한 대책을 속히 강구토록 지시했다고 서기원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광주사태는 『동아일보』에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사용된 용어로 볼 수 있다. 이 용어는 사건이나 상황 자체를 강조한 용어로서 참여주체나 책임성의 문제 보다는 사건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는 용어이다<sup>3)</sup>. 광주사태는 『동아일보』에서 1988년까지 지배적인 용어로 사용 되었으며, 정부가 5.18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규정한 이후에도 한동안 『동아일보』 지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였다.

3) ‘사태’는 책임귀인과 관련해서 시사점이 있는 용어로 볼 수 있다. 나현정과 민영(2010)은 2007년 태안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를 두고 삼성이라는 관련 기업의 이름이 부각된 기사와 태안이라는 지역명이 부각된 기사에 대하여 수용자들의 책임귀인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기업이 부각된 경우 그 책임을 기업에 돌리는 해석이 강화되었고, 지역명이 강조된 경우 사고가 자연 재해의 일종이었다는 인식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사태’는 ‘의거’, ‘항쟁’, ‘운동’ 등의 용어에 비해 주체성을 부각시키지 않고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2) 광주민중항쟁

‘민중항쟁’은 ‘사태’에 비해 참여주체와 투쟁적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있는 용어이다. ‘민중’의 의미는 1984년 5월 19일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 발표한 ‘아, 5월이여! 영원한 민주화의 불꽃이여!’라는 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80년 5월의, 독재를 타도했던 ‘민주’는, 외세를 배격하고 통일을 외치던 ‘민족’은,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려 했던 ‘민중’은 5월 광주의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히 살아있다.”(민중 문화운동 협의회 편, 1985, 428쪽)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민중’은 주로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려 했던 계급적 성격을 지닌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아일보』에서 ‘광주민중항쟁’은 광주사태 외의 용어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였는데, 5.18 발발 4년 후인 1984년 5월 19일 보도된 ‘밤에도 산발 대학생시위 격화’라는 제목의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 ‘광주민중항쟁’은 서울대학에서 열린 ‘광주민중항쟁영령위령제’를 언급하면서 단순 등장한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용어는 초기 대항담론의 용어 중 가장 활발히 사용된 용어로서 1985년에는 『동아일보』에서 대항담론의 용어 중 사용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2> 참조). 그러나 이 시기 『동아일보』는 광주민중항쟁을 단체명이나 문헌의 제목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광주민중항쟁이 『동아일보』에서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사용된 것은 1988년 5월 2일자 ‘5월의 광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다. 이 기사는 ‘오늘과 내일’이라는 고정 기자 칼럼에 김용정 사회부차장이 기명으로 작성한 기사였다.

5월이다. 활기찬 생명력이 싱싱한 푸르름으로 터져나오는 그런 계절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해마다 5월이 되면 지난 8년간 안으로만 응어리진 광주의 한과 원을 온몸으로 앓는다. 절절한 분노와 피울음이 아니라 안으로만 삭이는 한이 되어 앓는 이 ‘5월 증후군’은 정부차원의 ‘유감표명’이나 ‘광주시민의 명예회복’ 운운만으로 치유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5월병’은 ‘진실의 규명’과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의 부여라는 처방에 의해서만 치유책이 찾아질 수 있다.

1988년은 사회적으로도 5.18유족회의 명칭이 ‘5.18광주의거유족회’에서 ‘5.18광주민중항쟁유족회’로 바뀌는 등 민중항쟁이라는 용어가 대항담론의 주요 용어로 사용되었던 시기이다. 그러나 민중이라는 개념은 이적성을 지닌 용어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으며(최정운, 2007, 442~444쪽), 『동아일보』에서의 광주민중항쟁이라는 용어의 사용빈도 역시 ‘광주항쟁’이나 ‘광주학살’에 비해 차츰 낮게 나타나기 시작했다(<표 2> 참조).

## (3) 광주학살

‘학살’은 ‘사태’와 마찬가지로 사건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사건의 성격과 책임소재를 보다 분명히 하고 있는 용어로서 민중의 피해를 강조하고 있는 개념이다. 『동아일보』에서 ‘광주학살’은 1984년 5월 30일 ‘경찰 시위진압 새병기 개발/먹물 세례 분사기까지 등장’이라는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이 기사는 경찰이 대학생들의 시위진압을 위해 먹물 분사기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한국외국어대에서 열린 ‘광주학살시민진혼제’라는 행사명을 언급하면서 광주학살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기사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29일 외국어대학 앞에서 시위를 막던 경찰은 오후 4시 40분경 투석을 하던 학생들이 화염병까지 던지며 가두진출을 시도하자 이 먹물 분사기로 먹물을 뿌려 진압하기도 했다. 이 날 외국어대생 1백여 명은 오후 3시경 동교 도서관 앞에 모여 ‘**광주학살**시민진혼제’를 갖고 시위를 벌였다.

이 용어 역시 행사명을 단순히 옮긴 것이어서 적극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의 격화된 시위를 설명하기 위한 부정적인 맥락에서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광주학살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사용된 것은 1988년 7월 2일자 ‘횡설수설’ 코너를 통해서이다. 이 기사는 국회의원의 허위와 가식을 꼬집고 있는 기사로서 5.18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사는 아니었지만, 5.18을 ‘광주학살’이라고 직접적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광주학살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등장한다.

공개된 공익 법인의 자금내용, 그 착한 일도 못 밝히는 국회가 어찌 저 권력의 악행, 5공 비리와 광주학살의 진상을 알아낼 수 있겠는가. 역시 파택 시계 차고 다니다가도 국회에 나갈 때만 국산시계 차는 분들로는 안 되는 일인가.

특기할 만한 점은 1988년에는 광주학살이라는 용어의 사용빈도가 124회로 대항담론의 용어 중 125회 사용된 광주항쟁 다음으로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주로 ‘광주학살원흉처단위원회’와 같은 단체명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기는 하지만 간부급 내부필진들이 작성하는 칼럼에서도 학살이라는 표현이 적극적인 의미로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1988년부터 『동아일보』의 5.18 관련 기사의 논조가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가늠케 한다.

#### (4) 광주항쟁

‘학살’이 민중의 피해를 강조한 용어인 반면 ‘항쟁’은 민중의 투쟁을 강조한 용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광주항쟁’은 ‘광주민중항쟁’과 달리 참여 주체를 부각시키지 않고 있는 용어로서 계급적 성격이 다소 완화된 용어로 볼 수 있다. 『동아일보』에서 ‘광주항쟁’이라는 용어는 1985년 1월 15일 ‘경희대 학민추위장 정원영군 구속’이라는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처음 등장한다. 그러나 이 기사는 1984년 5월 16일 경희대에서 있었던 시위와 관련하여 뒤늦게 구속된 경희대 학생 관련 기사로서 광주민중항쟁, 광주학살과 마찬가지로 1984년 5월에 있었던 행사명과 관련이 있다. 광주항쟁은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 등장하고 있다.

서울 청량리 경찰서는 15일 전 경희대 ‘학민추위’ 의장 정원영 군(21·법대행정과 4년재학중 84년 제적)을 붙잡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정군은 지난해 5월 16일 경희대 학생회관 앞에서 동료학생 2백여 명을 선동, ‘범국민 **광주항쟁** 4주년 기념 민주화실천결의대회’라는 제목의 유인물 5백여 장을 뿌리고 이날 밤 8시까지 횃불시위를 벌인 혐의다. -(후략)-

그리고 광주항쟁이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사용된 시기 역시 광주민중항쟁이나 광주학살과 비슷한 시기인 1988년 2월 24일 ‘청와대와 백악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이다. 이 기사는 당시 고정

코너였던 ‘김중배 칼럼’에 실렸는데, 한국 정부의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성격을 비판하면서 5.18을 광주항쟁이라고 지칭하였다. 기사에서 용어가 등장하는 맥락은 다음과 같다.

나는 그 인간 소외의 정치를, 독재의 으뜸가는 죄악으로 단정한다. 인간이 빠져버린 정치는 태연히 인간에 대한 고문을 자행한다. 성고문과 박종철군 사건을 비롯한 부지기수의 고문사건들은 바로 그 인간이 빠져버린 정치의 구체적인 증상에 다름 아니다. 구태여 이 자리에서 **광주항쟁**을 들먹이는 것은 민망할 뿐이다. 그 5월의 참극 자체가 인간상실의 단적인 표현이며, 그 뒤에도 이어지는 불의와 항쟁의 불씨였던 것이다. 그 악순환이 거듭 ‘민은 줄인가’를 묻게 하며 ‘나의 손발을 묶는다 해도’ 끝내 꺾이지 않겠다는 투지의 원천이 아니었던가.

5.18을 항쟁으로 규정하는 시각은 5.18의 대표적인 대항담론으로 볼 수 있는데, ‘광주항쟁’의 사용빈도는 대항담론의 용어 중 가장 높다(<표 2> 참조). 뿐만 아니라 광주민중항쟁과 광주민주항쟁이라는 용어 역시 ‘항쟁’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항담론에서 가장 대표적인 용어는 ‘항쟁’이라고 볼 수 있다.

#### (5) 광주의거

‘광주의거’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단이 1984년까지 공식명칭으로 사용하였고(민중문화운동 협의회 편, 1985), 유족회도 1988년까지 ‘5.18광주의거 유족회’라는 명칭을 사용(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 1990)하는 등 초기에 활발하게 사용된 용어로서 이는 ‘4.19 의거’라는 명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최정운, 2007). 『동아일보』에서 ‘광주의거’는 1985년 5월 18일 ‘전국대학 격렬시위’라는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처음 등장하였는데, 광주교구사제단 주최로 열린 광주희생자추모미사 관련 소식을 전하며 ‘광주의거’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하였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주교구사제단은 △**광주의거**가 민주주의 수호, 진리와 정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민중봉기임을 인정 한다 △5.18기념사업 및 진상규명추진위원회 설립을 환영하며 광주의거가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는 등 6개항을 천명하였다.

이 기사에서 광주의거는 광주교구사제단의 표현을 단순히 인용한 것이다. 광주의거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사용된 것은 1987년 5월 18일자 횡설수설 코너에서다. 이 기사에서는 5.18이 정당한 이름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5.18을 광주의거나 항쟁으로 보는 시각이 4.19를 혁명인가 의거인가로 보는 시각과 비슷하다고 평가하였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더구나 5.18은 역사의 정명도 얻지 못한 채 내연한다. 흔히는 광주사태라고 부르지만, **광주의거** 또는 항쟁 등의 주장도 타오른다. 혁명인가, 의거인가를 두고 논란되는 4.19를 연상케도 한다. 그러나 7년 전 광주의 비극은, 우리 모두가 안은 민족의 내상임이 분명하다. 그것도 너무나 깊은 내상, 너무나도 아픈 내상이다. 해마다 이날이 오면, 그 우리의 내상을 어떻게 아물여 나갈 것인가가 걱정된다. 상처를 더욱 키우지 않는 치유의 처방은 없을까.

광주의거라는 용어는 1987년에 사용빈도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1987년에 등장하는 대항담론의 용어 중 가장 사용빈도가 높다(<표2>참조). 이는 평민당 소속 의원들이 광주의거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였고, ‘광주의거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하여 기사에서 자주 언급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8년 초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광주시민의 56.3%가 5.18을 ‘민중항쟁’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대답한 반면 ‘의거’라고 불러야 한다는 의견은 28.7%에 그쳤다(최정운, 2007, 444쪽). 1988년 이후 광주의거의 사용빈도는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며, 대항담론의 용어 중 가장 먼저 소멸한 용어라고 볼 수 있다.

#### (6) 광주민주항쟁

학생운동권의 ‘민주’라는 용어에 대한 인식은 1985년 4월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이 발표한 ‘아! 광주여! 민족의 십자가여!’라는 글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이 글에 따르면 운동의 목적은 첫째, 참다운 민주주의의 확립 둘째, 여러 외세들 사이에서 획득해야 할 민족 생존권의 보장 셋째,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소외와 불평등을 제거하는 민중해방의 실현이다. 그런데 이 세 개념은 유기적인 통일체로서 동시에 해결할 수밖에 없는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전남사회문제연구소 편, 1988, 262쪽). 즉, 운동권에서는 ‘민주’를 민족, 민중의 문제와 함께 다뤄져야 할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래서 ‘민주’라는 용어는 주로 사회운동세력 보다는 정치권에서 선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에서 ‘광주민주항쟁’은 다른 용어에 비해 비교적 늦은 1987년 11월 10일 ‘탈당-입당 바람...비난과 기대’라는 제목의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이 기사에서 민주당 김영삼 총재의 광주 유세 계획을 소개하면서 ‘광주민주항쟁희생자 추모를 위한 국민 대회’라는 명칭을 옮긴 것이 광주민주항쟁의 첫 사용이었다. 광주민주항쟁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는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총재는 오는 14일 오후 2시반 광주역 앞에서 열기로 되어 있는—(중략)—광주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이 대회의 명칭을 ‘군정종식 및 **광주민주항쟁**희생자 추모를 위한 국민대회’라고 명명하는 등 신경을 쓰고 있는데—(후략)—

비슷한 시기에 평민당은 ‘광주의거’라는 용어를, 민주당은 ‘광주민주항쟁’이라는 용어를 선호하였다. 광주민주항쟁은 1988년 5월 2일 ‘5월의 광주’라는 칼럼 기사에서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기사에서는 광주민주항쟁이라는 용어 뿐만 아니라 광주의거와 광주민중항쟁이라는 용어도 함께 등장하고 있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5월 병’은 ‘진실의 규명’과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의 부여라는 처방에 의해서만 치유책이 찾아질 수 있다—(중략)—오늘의 한국도 광주문제의 극복 없이는 자유와 민주 평등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남민주주의 청년연합의 **광주의거**에 대한 평가와 그들이 설정한 운동방향은 음미할 만하다—(중략)—광주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광주민주항쟁**을 있게 한 제 모순의 극복으로서만 가능하리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7) 광주민주화운동

‘운동’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현존 사회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한 대중의 자발적, 조직적, 집단적, 지속적 행위를 지칭하는 개념이지만, 노태우 정부가 제안한 ‘민주화운동’의 개념은 ‘항쟁’이나 ‘의거’와 같은 용어에 비해 격렬한 투쟁의 의미를 많이 희석시킨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아일보』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은 1988년 2월 17일자 ‘민화위 화룡점정 못했다’라는 제목의 보도 기사에서 처음 등장하였는데, 이 기사는 노태우 정부 출범 직전 활동한 정부 자문 기구인 민주화합추진위원회의 활동을 보도한 기사로서 박옥재 위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옥재 위원은 이날 회의 말미에 “위원들께서 최후진술로 알고 들어 달라”고 전제, “광주문제 진상규명이 50%도 안되고 거기에 책임질 사람도 없다는 결론을 내린 민화위의 한계가 안타깝다. 과잉진압은 그 자체가 불법인데도 왜 행위주체는 처벌이 안 되느냐”고 반문한 뒤 △5월 18일을 ‘**광주민주화운동의 날**’로 지정할 것—(중략)—등을 건의.

한편 1988년 4월에는 민주화합추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노태우 정부가 ‘광주사태 치유 방안’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발표에서 정부 발표로는 처음으로 5.18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규정하였다(전재호, 1999, 250쪽). 이 발표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의 사용 역시 크게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를 광주사태 치유 방안 발표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동아일보』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가 적극적인 표현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1988년 7월 2일 ‘숙제는 같은데 해답은 4인 4론’이라는 해설 기사에서다. 이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4당 대표의 국회연설 관련 내용을 현안별로 요약 정리하면서 각 당이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인식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항목으로 5.18문제에 대한 4당 대표의 입장을 보여주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소제목을 달았다.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는 1989년부터 『동아일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다. 이 용어는 대항세력이 아닌 정부가 사용을 주도한 용어로서 항쟁이나 의거와 같은 급진적 의미를 빼고 민주주의를 강조한 용어라 볼 수 있다. 이 용어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광주사태라는 초기 지배적 용어의 사용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며, 광주항쟁을 비롯한 대항담론의 용어들의 사용빈도 역시 차츰 줄어들기 시작하였다(<표 2> 참조). 『동아일보』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은 1989년 이후 지배적 용어로 부상하여 1990년 이후 5.18을 지칭하는 지배적 용어로 굳어졌다.

## 5. 『동아일보』 사설에 나타난 5.18 담론의 변화

앞서 『동아일보』의 보도 기사에 5.18 관련 용어들이 언제 어떻게 등장하였고, 어떠한 변화 추이를 보여 왔는지를 살폈다. 『동아일보』 기사에서 5.18 관련 용어들은 대부분 전두환 정부시기에 등장을 하였고, 노태우 정부 집권 초기 이후 차츰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수렴되어 가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김재균, 2005; 이용기, 1999; 전재호, 1999)에서 밝히고 있듯 노태우 정부 이후로도 5.18 담론은 많은 변화를 보여 왔다고 할 수 있으며,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용어가 수렴된 이후에도 보도가 구성하는 담론의 내용은 시기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도 기사의 용어

분석에 더해, 5.18 관련 사실에 대한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일보』의 5.18 관련 사실의 논조가 크게 변화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비극적 사태 담론’, ‘진상규명 담론’, ‘명예 회복 담론’, ‘역사 심판 담론’, ‘적극적 처벌 담론’, ‘정치 담론화’라는 담론 패키지(Gamson & Modigliani, 1986)를 제시하고, 이러한 담론 패키지들이 한국사회의 정치·사회적 변화와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는 지를 살폈다.

### 1) 비극적 사태 담론(1980~1983)

잘 알려진 대로 5.18 발발 당시 『동아일보』의 보도는 사건의 배경이나 원인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의미 부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계열사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 보도하면서 이러한 ‘비극적 사태’는 원만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추상적 원칙론만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 『동아일보』의 5.18 관련 첫 사설보도는 5.18 발발 엿새 만인 1980년 5월 24일에 이루어졌다. ‘유혈의 비극은 끝나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광주사태를 맞이하여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더 이상의 유혈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며 그 수습의 방법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이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설에서는 또 미국과 북한에 대한 언급도 등장하였는데 “미국정부도 북괴가 광주사태를 악용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거니와 우리 국내가 혼란해지면 북괴가 무슨 엉뚱한 망상에 빠질지 모른다”며 5.18을 안보문제와 연결시켰다. 이 사설의 주요 특징은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나 배경에 대한 분석 없이 5.18을 단순히 국가적 비극 사태로 축소시켜 보도한 것이며, 안보와 치안회복, 국가주도의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5.18 발발 기간 동안 대부분의 사설에서 발견이 된다. 안보를 강조한 또 다른 사설인 5월 26일 ‘북한은 오판 말라’는 보다 직접적으로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향을 자세하게 다루면서 “미국 측의 (이와 같은) 즉각적인 대응 조치는 어떤 형태건 북한의 대남적대행위는 가차 없이 분쇄될 것임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평을 했다. 이 사설은 신군부가 5.18발발 기간 동안 중요한 동원 이데올로기로 활용하였던 반공 이데올로기(김무용, 1999, 126쪽)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계열사령관 이회성이 담화문 발표에서부터 5.18을 불순 인물과 고정 간첩에 의한 북한의 적화 책동으로 규정한 데서도 이러한 사실은 드러난다(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1997, 29쪽).

5.18발발 기간 동안 사설보도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치안회복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예컨대 5월 26일자 ‘광주에 생필품 공급 대책을’이라는 제목의 사설은 이러한 특징을 지닌다. 이 사설에서는 “유혈시위사태로 외부와 교통이 차단된 광주시내에 생활필수품과 의약품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광주의 상황을 전하며 정부는 광주시민들에게 일상생활물자를 공급하고 부상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기계를 긴급 보급기로 결정한 바 있지만 “현지 치안상태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광주의 치안 회복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 역시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강조한 신군부의 이데올로기 전략(김무용, 1999, 124쪽)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동아일보』의 5.18 발발 당시의 사설보도는 대규모 유혈 사태가 일어난 배경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비극적 사태 자체에만 집중한 보도를 하였으며, 5.18발발 당시 신군부가 각종 기제의 작동을 무력화시키고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장악하기 위해 동원한 이데올로기(김무용,

1999, 123~129쪽)의 틀 안에서 보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5.18의 의미는 단순한 국가적 비극 사태로 축소되었다.

## 2) 진상규명 담론(1985~1987)

5.18 이후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초기부터 강력한 권위주의적 통치를 실시하였고, 정권이 구축한 5.18의 지배 담론 역시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전재호, 1999). 『동아일보』의 5.18관련 사설보도 역시 정권이 구축한 지배 담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의 강압적 권위주의 통치에 균열이 생기고 1983년 말 유화국면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5.18 대항 담론들의 등장하였고, 지배적 5.18 담론에도 조금씩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동아일보』 사설에서 5.18 담론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이 보다 늦은 1985년에 이르러서다. 그해 5월의 서울 미문화원 점거사건은 국회에서 5.18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계기가 되었고, 『동아일보』도 이때부터 사설에서 5.18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다.

『동아일보』는 국회에서 5.18문제가 처음으로 논의된 12대 국회 다음날인 1985년 5월 20일 ‘광주를 생각한다’라는 사설에서 “광주사태는 우리 정치가 언젠가 딛고 넘어가야지 결코 피해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느낀다”면서도 여당과 야당의 입장을 모두 이해한다는 양시론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후 사설보도에서도 『동아일보』는 5.18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주장하면서도 미온적인 정부에 대해서 옹호적인 다소 애매한 입장을 유지하였다. 이는 신민당이 ‘광주사태 진상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결의안’을 발의한 다음 날인 1985년 5월 31일 게재한 ‘광주와 개헌 등 결의안’ 사설에서도 확인이 된다. 이 사설 역시 진상규명을 주장하면서도 “민정당도 광주사태가 특수상황에서 빚어진 불행한 사태였다고 본다면 그 나름대로 할 말이 있을 법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대체적으로 이 시기 『동아일보』의 사설은 진상규명 문제에 소극적인 정부여당에 대해 특별히 비판적이지는 않았지만 진상규명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찬성의 입장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윤성민 국방부장관의 광주사태 국회보고 다음날인 6월 8일자 ‘국방장관의 광주 보고’ 사설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사설은 윤장관의 부실한 국회 보고에 대해 특별히 비판적이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사망자 숫자 뿐만 아니라 사건의 배경과 경위 그리고 군의 진압과정 등 의혹의 대상이 되었던 모든 관련 사실에 관해서도 좀 더 명쾌하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해서는 안되리라고 믿는다”며 진상규명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 시기 『동아일보』 사설은 처음으로 5.18에 대한 진상규명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1983년 말 유화국면 이후 시민사회와 야권에서 5.18 문제가 이미 재점화 되었음에도 『동아일보』의 사설보도에서는 진상규명 문제가 1985년에 이르러서야 등장한다는 점에서 『동아일보』가 진상규명 담론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1985년도에 시민사회와 야권이 제기한 책임자 처벌 문제나 국가의 인정 문제 등의 대항 담론이 『동아일보』의 사설보도에서는 특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아일보』의 5.18 관련 사설 보도는 여전히 국가가 주도한 담론의 틀을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3) 명예 회복 담론(1988~1990)

『동아일보』의 5.18 관련 사설보도가 소극적인 진상규명 담론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명예회복 담론으로 전환한 것은 1988년 이후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직선제 개정 후 첫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신군부 출신의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5.18담론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민주화합추진위원회의 권고로 노태우 정부가 1988년 4월 1일 ‘광주사태 치유방안’을 발표하고, 5.18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규정하면서 5.18담론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동아일보』는 광주사태 치유방안 발표 다음 날인 1988년 4월 2일자 ‘광주문제의 시각전환’ 사설을 통해 명예회복 문제를 제기하였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정부의 노력, 방향전환의 첫걸음이라는 데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무엇보다 광주사태의 성격을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규정하고 그 같은 사태발생에 유감이라는 표현으로 사과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지난 80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계엄사령부는 ‘일부 폭도들의 선동에 의한 난동’으로 규정하였고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은 8년이 가까워지도록 변함이 없었다. 이로 인해 사건의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은 ‘폭도’ 또는 ‘폭도의 가족’이라는 불명예의 굴레를 쓰고 있어야 했다. 희생에 따른 아픔도 아픔이려니와 이러한 명예롭지 못한 낙인이 응어리를 풀지 못하게 한 요인이 되어온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존심의 문제다.

이 사설 이후 『동아일보』는 5.18 문제에 대해 훨씬 공세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1988년 5월 16일 게재한 ‘5.16에서 5.18까지’ 사설에서는 “저 광주의 항쟁은 정치의 모순과 계층의 모순 그리고 민족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몸부림으로 정리된다”는 주장을 폈는데, 사설에서는 처음으로 5.18을 ‘항쟁’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뒤인 5월 18일 ‘광주의 그날’ 사설에서는 “광주문제의 조사범위는 모든 것이 망라돼야하고 조사대상도 성역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전두환 전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러한 『동아일보』의 태도변화는 1988년 4월 총선에서 한국 선거사에서 유래가 없었던 여소야대의 정국이 만들어지고, 야당과 시민 사회 내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5공 청산과 5.18 책임자 처벌을 내세우며 노태우 정권을 압박하며 만들어진 정치 지형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의 논조는 1988년 8월 국회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에 여야 공동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출범시키게 되면서 더욱 공세적이 된다. 특히 11월 16일자 ‘역사를 찢지말라’ 사설에서는 5.18을 국가적 비극 사태가 아닌 민주화항쟁으로 규정하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기 이후 『동아일보』는 신군부가 구축한 지배 담론에서 차츰 벗어나 독자적인 주장도 펴기 시작하였는데, 6월 항쟁 이후 조성된 정치지형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 4) 역사 심판 담론(1993~1994)

노태우 정부 이후 1993년 3당 합당을 통해 집권한 김영삼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이전 정권들과는

달리 5.18담론을 주도해 나갔다(전재호, 1999, 255쪽). 이는 김영삼 정부 출범 첫 해인 1993년 5월 13일 발표된 ‘광주민주화운동 대국민 담화’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담화문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5.18의 민주적 성격을 강조하고 자신들을 5.18의 연장선 위에 있는 민주정부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5.18 진상규명의 목적이 갈등을 재연하거나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미흡한 부분은 ‘훗날의 역사에 맡기자’는 모호한 표현으로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대통령비서실, 1994, 185~186쪽).

『동아일보』는 김영삼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나타내며, 역사 심판 담론을 전제하였다. 담화문 발표 직후인 5월 15일 ‘1993년 5월의 광주’ 사설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담화를 5.18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결단’이라 평가하고, 책임자 처벌 보다는 화해와 용서, 아량을 강조한 김영삼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3일 뒤 5.18 13주년에 게재한 ‘자랑의 역사 부끄러운 역사?’ 사설에서도 “역사는 되풀이된다. 하지만 또 항상 새롭게 쓰여 진다. 역사를 보는 시각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기간의 여과과정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으로 역사 심판론에 무게를 실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5월 23일자 ‘5·18행사주관을 보내며’ 사설 역시 “진상규명을 역사에 맡기자는 것에 대해 부정적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추진해보자”고 주장함으로써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 심판론을 뒷받침하였다.

### 5) 적극적 처벌 담론(1995~1996)

김영삼 정부 초기의 역사심판론은 3당 합당으로 집권한 김영삼 정부가 다양한 세력의 이해를 만족시키기 위해 절충적으로 제기한 5.18 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용서와 화합을 강조하였던 이러한 주장은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5.18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졌다. 특히 1994년 5월 13일부터 1995년 4월 3일까지 5·6공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하여 58명에 대한 총 70여건의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는데(김재균, 2000), 이에 대해 검찰이 1995년 7월 18일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5.18문제는 다시 한 번 전국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특히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그동안 5.18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시민사회 내 다양한 세력들도 크게 반발하고 나서게 되면서 범국민적 저항이 일어났다(전재호, 1999).

『동아일보』 사설의 5.18관련 논조 역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계기로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동아일보』는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 직후인 7월 20일 게재한 ‘광주의 진실은 어디로’ 사설에서 “검찰 스스로 이 땅에 정의와 법치를 실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특히 이 사설은 이전 보도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통렬한 표현들이 등장하였다.

공수부대 등 계엄군은 손을 흔드는 어린이, 멍감는 어린이를 사살하고, 길가에 나와 시위를 구경하며 단순히 구호를 외치거나 총상자들을 구호 호송하는 시민들에게까지 발포하고 대검으로 난자했다고 검찰은 밝히고 있다. 진압군들은 훈장까지 받았지만 발포명령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수사결과를 광주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정국 또한 급변하였다. 297개 단체가 범국민적 연대기구인 ‘5.18학살자 처벌특별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전국적 수준의 특별법 제정운동을 주도하였고, 야당인 국민회의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다(윤선자, 2005). 이 과정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정국의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의도로 1995년 11월 24일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하였으며, 정부의 5.18담론 역시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는 것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로 바뀌었다(전재호, 1999). 『동아일보』는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법 제정 지시가 있었던 다음 날인 11월 25일 ‘5.18특별법 제정 결단’ 사실을 통하여 특별법 제정 지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으며, 이 후 11월 30일 ‘특별법으로 5·18 청산술’, 12월 7일 ‘5.18특별법 빨리 만들라’, 12월 12일 ‘특별법 거부 명분없다’ 등의 사실을 통해서 특별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였다. 특히, 12월 13일 ‘12.12 그 오욕의 역사’ 사실에서는 5.18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며, “만약 여기에 정략을 앞세우는 정파가 있다면 그가 누구든 국민과 역사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신기도 하였다.

1995년 12월 21일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자 다음날인 12월 22일 ‘다시 돌아보는 광주항쟁’ 사실을 통해 “광주항쟁의 정신은 6월 항쟁으로 이어져 군사 독재정권이 이 땅에서 추방되는 원동력이 됐다”고 5.18에 항쟁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한 이 사실에서 『동아일보』는 “계엄령 하의 언론검열 때문에 진실을 보도하지 못했던 언론으로서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한탄하면서, 광주 주민들과 희생자 유족들에게 보낼 위로의 말을 찾을 수 없다”며 5.18 당시 자사의 보도에 대한 유감과 반성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보도 역시 5.18 담론 실천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 사회의 정치지형의 변화와 그로 인한 5.18 지배 담론의 변화를 수렴해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 6) 정치 담론화(1997~2010)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시민 사회 내 민주화 운동세력과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불만족스러운 것이었다(김성국, 2007).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후 정치 사회나 시민 사회의 5.18 대항담론은 크게 줄어들었으며(전재호, 1999), 『동아일보』의 5.18 관련 사실의 양 역시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특히 『동아일보』는 5.18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1998년에 5.18 관련 사실을 전혀 신지 않았을 정도로 5.18 이슈를 소극적으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재임 중인 2000년에 민주당 소속 386 출신 국회의원들이 5.18 광주민주항쟁 기념전야제 전달 술자리를 벌여 물의를 일으킨 사건은 5.18담론이 정치 투쟁의 수단이 되고 마는 정치 담론화의 기폭제가 되었다. 『동아일보』는 2000년 5월 26일 ‘부끄러운 386 정치인’ 사실에서 “망월동에 추모하려 간 정치인들이 아가씨들과 함께 음주가무로 밤을 지낸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짓”이라며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386 운동권 및 재야 출신들”의 분별없는 술자리를 강도 높게 비판하였는데, 이 사건 이후 『동아일보』는 5.18 이슈를 정부 권력을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5.18 담론의 정쟁화 경향은 지속되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기 5.18 기념일을 전후해 게재된 사설에서 확인이 되는데, 2005년 5월 18일 에 게재된 ‘5.18 민주화운동 25돌에 생각한다’ 사설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반미감정은 정치의 중심권에 진입한 386 운동권 세대의 의식과 행동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상황의 변화에 맞춰 그 타당성을 되짚어 볼 때”라는 주장을 실었다. 2006년 5월 19일 ‘5.18 광주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사설에서는 “모두가 ‘5·18정신’을 말했지만 결국 대표전쟁일 뿐”이라며 “노 대통령부터 과연 반독재 투쟁시대의 의식에서 벗어났는지 자성해 볼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동아일보』는 김대중 정부 이후 정부 주도의 지배 담론에서 벗어나 스스로 5.18 담론을 주도하며 이를 정치 담론화 해 나가는 양상을 보였다.

## 6.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표적 주류 언론인 『동아일보』가 1980년 이후 30년간 5.18 담론을 어떻게 현실 구성해 왔으며, 한국의 정치변동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여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동아일보』의 5.18 관련 전체 기사에서 5.18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어느 시기에 어떠한 맥락으로 등장하여 어떠한 변화를 겪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사설이 구성하고 있는 구체적인 5.18 담론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동아일보』 지면에 나타난 5.18 관련 용어 사용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5.18을 지칭하는 용어로 광주사태, 광주민중항쟁, 광주학살, 광주항쟁, 광주의거, 광주민주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등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광주사태가 5.18발발 직후부터 지배적 용어로 사용되다가 1983년 유화국면 이후 광주민중항쟁, 광주학살, 광주항쟁, 광주의거와 같은 대항담론의 용어들이 차례로 등장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주민중항쟁, 광주학살, 광주항쟁과 같은 대항담론의 용어들은 1984년 5월 대학가에서 열렸던 5.18관련 행사명을 언급하며 처음 등장하였으며, 1988년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항담론의 가장 대표적인 용어는 ‘항쟁’이었으며, ‘광주의거’와 ‘광주민중항쟁’은 주로 야당 정치권에서 사용된 대항담론의 용어로 조사되었다. 1988년 노태우 정부가 광주사태 치유 방안을 발표한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하였는데, 이 용어는 1989년 이후 『동아일보』에서 5.18을 지칭하는 지배적 용어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둘째, 『동아일보』 사설에 나타난 5.18 담론의 변화를 살핀 결과, 사설에 나타난 5.18 담론은 비극적 사태 담론, 진상규명 담론, 명예 회복 담론, 역사 심판 담론, 적극적 처벌 담론, 정치담론화의 순으로 전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1980년에서 1983년 사이에는 비극적 사태 담론이 전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극적 사태 담론이란 5.18의 의미를 단순한 비극적 사건으로만 축소시키고 있는 특징을 지닌 담론이다. 1985년부터는 진상규명 담론이 전개되는데, 이는 정부의 지배 담론과 야당이 제기한 대항담론에 대해 양시론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5.18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였던 담론을 의미한다. 1988년부터는 소극적인 진상규명 담론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명예회복 담론이 전개된다. 명예회복 담론은 이전 시기에 비해 훨씬 공세적인 성격을 띤 담론으로서 5.18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주장하기 시작한 담론이다. 1993년에는 역사심판론이 전개되는데, 이는 5.18에 대한 평가를 역사에 맡기자는 담론으로서 5.18 문제해결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담론이다.

그러나 1995년부터 다시 적극적인 처벌 담론이 전개되기 시작하는데, 적극적인 처벌 담론은 ‘역사 심판론’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로 다시 선화된 담론으로서, 이 시기 『동아일보』는 지면을 통해 5.18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매우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한편 1997년 이후로 『동아일보』의 5.18 관련 보도는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며, 정치담론화 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도 기사에서의 5.18 관련 용어 사용의 변화와 사설에서의 5.18 담론의 변화는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는 있으나, 변화의 시점과 패턴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도 기사에서 5.18 관련 용어들은 전두환 정부시기에 대부분 등장을 하여 노태우 정부 집권 초기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수렴되어간 반면 사설에서의 5.18 담론은 노태우 정부 이후에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보도 기사에 등장하는 특정 용어의 수량적 측면이 기사가 구성하고 있는 담론 구성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정치적으로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된 이후에도 『동아일보』의 5.18 이슈에 대한 태도와 관점은 복잡한 변화를 거쳐 왔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5.18 용어의 변화와 담론의 변화를 분리시켜 논의한 것은 이 논문의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5.18 관련 용어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사설이 구성하고 있는 5.18 담론 패키지들과 어떠한 연관성을 맺고 있으며, 어떻게 조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정치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필연적으로 과거 ‘그 자체’로 우리에게 재현되지 않는다. 또한 곧바로 과거의 사건이 특정한 ‘의미’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일정한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세력들 간의 의미 투쟁이 발생하며, 언론은 다양한 의미주체들이 주도적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 경합하는 대표적 담론투쟁의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주류 언론 안에서 전개되는 ‘의미 투쟁’은 어디까지나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용인하는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Gitlin, 1980; Hallin, 1986). 특히 한국의 경우 전두환 정부 시기까지 언론이 ‘준 국가 기구’(박승관·장경섭, 2000)로 불릴 정도로 통치체제에 예속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동아일보』가 구성하는 5.18 담론은 정부가 주도하는 지배 담론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이 연구에서 나타나는 주요 담론들의 변화는 『동아일보』 스스로 주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중요한 정치·사회적 계기들에 의해 촉발된 지배 담론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언론-정부의 ‘밀월관계’가 깨어진 김대중 정부시기(조항제, 2003) 이후로 『동아일보』는 정부 주도의 지배 담론에서 벗어나 스스로 5.18 담론을 주도하며 이를 정치담론화 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 연구에서 나타나듯 하나의 역사적 사건은 정치 권력과 지배 문화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새롭게 구성되고 쓰여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배 담론의 변화는 사회적 기억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언론학계에서 5.18 담론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었다. 앞으로 5.18 담론의 통시적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다룬 연구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강철수·윤석년 (2010). 5.18 30주년 언론보도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10권 4호, 5~39.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편 (1997).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 총서』, 제2권. 광주: 광주광역시.

- 김무용 (1999). 한국 현대사와 5.18민중항쟁의 자화상. 학술단체협의회 편, 『5.18은 끝났는가』(90~131쪽). 서울: 푸른숲.
- 김성국 (2007). 국가에 대항하는 시민 사회,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1: 5.18민중항쟁의 의의』. 서울: 푸른숲.
- 김영택 (2007). 5.18 광주민중항쟁의 초기 성격.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3: 5.18민중항쟁의 전개과정』. 서울: 푸른숲.
- 김재균 (2000). 광주보상법과 5·18특별법 결정과정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재균 (2010). 『5·18과 한국정치』. 서울: 에코미디어.
- 나현정·민영 (2010). 상징적 이름짓기의 프레이밍 효과. 『한국언론학보』, 54권 4호, 209~232.
- 대통령비서실 (1994). 『김영삼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 서울: 공보처.
- 민중문화운동 협의회 편 (1985). 『80년대민중민주운동 자료집』. 서울: 민중문화운동협의회.
- 박선희 (2002). 언론의 정치적 현실구성에 대한 담론분석: 5.18 특별법 제정에 관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사설을 중심으로. 『정치·정보 연구』, 5권 1호, 209~248.
- 박승관·장경섭 (2000). 한국의 정치변동과 언론권력: 국가-언론 관계모형 변화. 『한국방송학보』, 14권 3호, 81~113.
- 송정민 (1999). 5.18 언론 보도의 행태, 1980년에서 1997년까지. 학술단체협의회 편, 『5.18은 끝났는가』(370~392쪽). 서울: 푸른숲.
- 송정민·한선 (2005). 5.18 신문사건의 의미구성에 관한 비교연구: 조선일보와 광주일보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5권 1호, 117~150.
- 윤선자 (2005). 5·18광주항쟁과 1980~199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 『민주주의와 인권』, 5권2호, 79~110.
- 윤영태 (2009). 5.18과 신문보도: 5.18 관련 신문 기사의 실태와 문제점. 『2009년 한국언론정보학회 쟁점세미나: 5.18과 언론 자료집』, 9~25.
- 이용기 (1999). 5.18에 대한 역사서술의 변천. 학술단체협의회 편, 『5.18은 끝났는가』(393~419쪽). 서울: 푸른숲.
- 이원섭 (2007). 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 분석: 조선, 중앙, 동아일보와 한겨레, 경향, 서울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동아연구』, 52호, 325~366.
- 이재경·김진미 (2000). 한국 신문 기사의 취재원 사용관행 연구. 『한국언론학연구』, 2호, 160~181.
- 임칠성·노시훈 (2004). 5.18 항쟁 관련 유인물과 성명서 어휘의 계량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4권 1호, 179~237.
- 전남사회문제연구소 편 (1988). 『5.18 광주민중항쟁 자료집 III-20』. 광주: 광주.
- 전재호 (1999). 5.18담론의 변화와 정치 변동. 학술단체협의회 편, 『5.18은 끝났는가』(238~265쪽). 서울: 푸른숲.
- 정일준 (2004). 5.18담론의 변화와 권력-지식관계. 『민주주의와 인권』, 4권2호, 103~125.
- 조향제 (2003). 『한국의 민주화와 미디어 권력』. 서울: 한울아카데미.
- 최정운 (2007). 폭력과 언어의 정치: 5·18 담론의 정치사회학.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1: 5.18민중항쟁의 의의』. 서울: 푸른숲.
-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 (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서울: 풀빛.
- 허만호·김진향 (2007). 올바른 역사인식을 통한 5·18의 사회적 담론분석. 5.18기념재단 편,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1권』(355~382쪽). 광주: 5.18기념재단.

- Foucault, M. (1980). Truth and Power, In C. Gordon. (ed.),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홍성민 역 (1991). 『권력과 지식: 미셸 푸코와의 대담』(141~167쪽). 서울: 나남.
- Gamson, et al. (1992). Media images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8, 373~393.
- Gamson, W. A. & Modigliani, A.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 Constructioni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1). 1~37.
-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new lef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all, S. (1980). Encoding/decoding, In S. Hall et al. (eds.), *Culture, media, language*. London: Hutchinson. 128~138.
- Hall, S. (1982). The Rediscovery of 'Ideology': Return of the Repressed in Media Studies, In M. Gurevitch et al. (eds.), *Culture, society, and the media*. London: Methuen. '이데올로기'의 재발견: 미디어 연구에서 억압되어 있던 것의 복귀, 임영호 역 (1996).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235~285쪽). 서울: 한나래.
- Hallin, D. (1986). *The 'uncensored war': The media and Vietna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ills, S. (1997). *Discourse*. 김부용 역 (2001). 『담론』. 서울: 인간사랑.
- Macdonnell, D. (1986). *Theories of discourse*. 임상훈 역 (1992). 『담론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울.
- Simon, F. & Jerit, J. (2007). Toward a theory relating political discourse, media, and public opinion. *Journal of Communication*, 57(2), 254~271.
- van Dijk, T. (1988). *News as discours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Williams, R. (1977). *Marxism and literature*. 박만준 역 (2003). 『문학과 문화이론』. 서울: 경문사.

(투고일자: 2011. 11. 29, 수정일자: 2012. 4. 27, 게재확정일자: 2012. 5. 2)

## ABSTRACT

## A Study on 5.18 Discourse in Korean Newspaper: An Analysis of the *Dong-A Ilbo*

Yun-Cheol Heo\* · Seung-Hwa Kang\*\* · Hyo-Ju Park\*\*\* · Chae Bae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Dong-A Ilbo*, a prevailing newspaper in Korea, has constructed 5.18 discourse. In the last thirty years or so in Korea, ‘5.18(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in both academic and social realm, has been one of the most disputed issues in the process of political change. However,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is topic in the field of communication study. Thus, we attempted to illuminate the construction of 5.18 discourse by using terms analysis and discourse analysis of editorials during the period of May 18, 1980-December 31, 2010. From the study, it is found that the use of terms has changed from ‘crisis’ through ‘resistance’, ‘slaughter’, ‘revolt’ to ‘democratization movement’ in the *Dong-A Ilbo*. And it is also found that 5.18 discourse has been developed in the order of ‘tragic incident discourse’, ‘truth investigation discourse’, ‘rehabilitation discourse’, ‘deferment discourse’, ‘punishment discourse’, ‘political strife discourse’ in the editorials of the *Dong-A Ilbo*. These shifts of terms and discourse have been mostly led by socio-political change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central characteristics of 5.18 discourse of the Korean mainstream press were elaborated and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were discussed.

Keywords: May 18,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media discourse, terms analysis, media history, *Dong-A Ilbo*

---

\* Doctoral Student, Dept. of Communi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 Doctoral Student, Dept. of Communi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 Graduate Student, Dept. of Communi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Dept. of Communi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